



# 혁신제품 조달 사업 8년, 공공부문 구매·활용 성과는?

경제산업사업평가과 남명진 분석관

## 검토 배경

▪ 정부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나,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점검 필요

- 그동안 공공조달은 기술혁신보다 인증 취득이 용이한 부분 개량에 집중하는 등 기술혁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
- 이에 정부는 캐나다 등 조달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(PPI,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) 제도를 벤치마킹하여, 공공조달의 대규모 구매력<sup>1)</sup>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,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·추진 중임
-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,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고 2030년까지 누적 5,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, 제도 도입 8년차를 맞아 추진실태를 점검할 필요

## 혁신제품 개요

▪ 혁신제품이란 공공성·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각 부처 추천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<sup>2)</sup>을 의미하며, [유형 1]과 [유형 2]로 구분

- [유형 1]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가 주관하며,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과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 중에서 추천함
- [유형 2]는 조달청이 추천하는 혁신시제품으로,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이 있음

[표 1] 혁신제품의 유형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기관   | 지정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형 1<br>(연구개발·기술인정 혁신제품) | 17개 부처 |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,<br>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 |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<br>(재정경제부 소관) |
| 유형 2<br>(혁신시제품)          | 조달청    | 혁신시제품(공급자제안형, 수요자제안형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조달청

☞ 본 호는 2026년 7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「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」의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·정리한 것임

1)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자체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공공조달 구매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총 225조원으로 같은 해 GDP 2,557조원의 8.8%에 해당되는 규모임

2)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(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)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(이하 “혁신제품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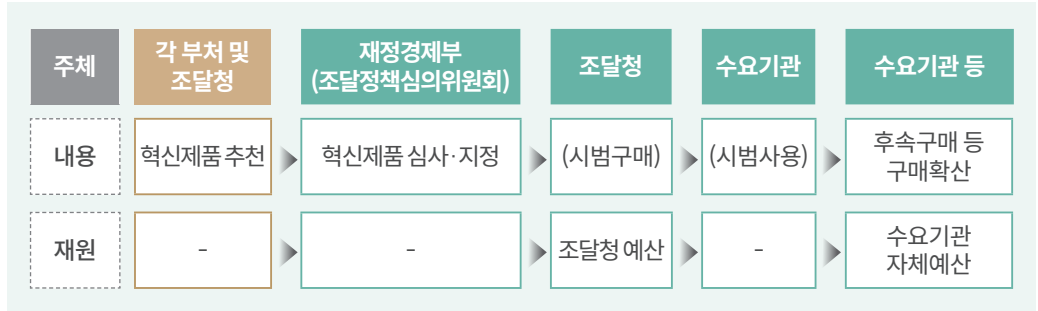
1.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

2.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



- (추천, 지정단계) 각 부처와 조달청은 공공성·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조달정책심의 위원회에 추천하고, 동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함
- (시범구매)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각 수요기관에 제공하고, 수요기관은 시범사용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함
- (후속구매) 수요기관은 시범사용 후 자체예산으로 후속구매(본 구매)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시범사용 없이 다른 기관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바로 구매할 수도 있음

[그림 1]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주요 추진단계



자료: 조달청

▪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집행액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[유형 1] 사업 483억 6,500만원, [유형 2] 사업 606억 2,400만원으로, 총 1,089억 8,900만원임

▪ (추천·지정 단계) 누적 2,774개를 지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굴 둔화와 지정기간 만료로 유효한 혁신제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, 신규 제품 적극 발굴 필요

- 2021~2022년 정점 이후 지정건수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[유형 1] 제품의 경우 조달청을 제외한 17개 부처가 주관하는데도 지정실적의 비중은 65.4%에 불과

[표 2] 혁신제품 지정 실적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계     | (단위: 개, %)<br>(비중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유형 1<br>(연구개발·기술인정 혁신제품) | -    | 186  | 458  | 414  | 172  | 282  | 303  | 1,815 | (65.4)             |
| 유형 2<br>(혁신시제품)          | 66   | 93   | 165  | 192  | 112  | 140  | 191  | 959   | (34.6)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| 66   | 279  | 623  | 606  | 284  | 422  | 494  | 2,774 | (100.0)            |

자료: 조달청

- 사업 초기에 지정된 혁신제품 중 841개(30.3%)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를 보완할 신규 지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상태가 유효한 제품의 비중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, 신규 지정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여 유효한 혁신제품의 풀(pool)을 확충해 나갈 필요

[표 3] 혁신제품 지정 유효 여부

| 구분         | 기간만료   | 유효     | 취소    | 계       | (단위: 개, %)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2019~2025년 | 841    | 1,904  | 29    | 2,774   |            |
| (비중)       | (30.3) | (68.6) | (1.1) | (100.0) |            |

자료: 조달청

## 추진단계별 성과 점검

▪ (구매·사용 단계) 시범구매 제품 중 69.3%만이 후속구매로 이어졌고, 공공구매 실적 없는 제품이 32.2%에 달하고 있으므로, 후속구매율 향상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

-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구매한 제품 907개 중 629개(69.3%)만이 후속구매로 이어져 후속구매율 불충분<sup>3)</sup>

[표 4] 혁신제품 시범구매 이후 후속구매 실적

(단위: 개, 억원, 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시범구매('19년~'24년) |        |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('19년~'25년)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품수(A)          | 구매액(B) | 제품수(C)                 | 비율(C/A) | 구매액(D) | 비율(D/B) |
| 유형 1<br>(연구개발·기술인정 혁신제품) | 428             | 995    | 301                    | 70.3    | 5,073  | 509.8   |
| 유형 2<br>(혁신시제품)          | 479             | 1,215  | 328                    | 68.5    | 7,109  | 585.1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| 907             | 2,209  | 629                    | 69.3    | 12,182 | 551.5   |

자료: 조달청

-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된 2,774개의 혁신제품 중 공공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이 892개(32.2%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과성 저하

[표 5] 혁신제품 지정 후 구매실적 유무

(단위: 개, 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혁신제품 지정<br>제품 수(A) | 구매실적이 있는<br>제품 수(B) | 구매실적이 없는<br>제품 수 | 구매율<br>(B/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유형 1<br>(연구개발·기술인정 혁신제품) | 1,815              | 1,165               | 650              | 64.2         |
| 유형 2<br>(혁신시제품)          | 959                | 717                 | 242              | 74.8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| 2,774              | 1,882               | 892              | 67.8         |

자료: 조달청

-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구매액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<sup>4)</sup>하고 있으나, 기관별로 보면 절반 정도의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관 유형별 편차 발생

[표 6]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달성 현황

(단위: 개, %)

| 구분     | 2023년 |      |      | 2024년 |      |      | 2025년 | 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| 대상기관  | 달성기관 | 달성률  | 대상기관  | 달성기관 | 달성률  | 대상기관  | 달성기관 | 달성률  |
| 중앙부처   | 47    | 26   | 55.3 | 47    | 27   | 57.4 | 48    | 27   | 56.3 |
| 지방자치단체 | 294   | 227  | 77.2 | 295   | 188  | 63.7 | 295   | 201  | 68.1 |
| 공공기관   | 356   | 125  | 35.1 | 356   | 126  | 35.4 | 353   | 119  | 33.7 |
| 지방공기업  | 151   | 107  | 70.9 | 158   | 126  | 79.7 | 158   | 120  | 75.9 |
| 합계     | 848   | 485  | 57.2 | 856   | 467  | 54.6 | 854   | 467  | 54.7 |

자료: 조달청

▪ (확산 단계) 일부 혁신제품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이 실증을 통해 입증되지 못해 구매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정기준을 정비할 필요

3) 2025년도 조달청 조사 결과, 후속구매율이 저조한 사유는 예산부족(43.3%), 시범구매를 통한 수요충족(25.8%), 제품 가격 불만족(11.2%), 제품 성능 불만족(7.9%), 유지관리 불만족(5.8%) 등임

4) 2025년의 경우 구매목표액은 7,984억원, 구매액은 1조 976억원으로 달성률은 137.5%임

-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(조달청), 전자식 자가세정 보안용 카메라(과기정통부) 등은 우수한 혁신제품으로 평가됨
- 반면, 인체통과형 공기정화시스템(조달청)은 사용환경에 부적합하고, 실외 미세먼지 저감 장치(조달청)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, 수중 예인 케이블(해양수산부) 등은 공공성 또는 혁신성 미흡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없음

#### ▪ (사후관리·환류 단계)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, 구매 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

-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한 기관은 시범사용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(2025년의 경우 전체 474건 중 기한 후 제출 133건, 미제출 18건)
- 사이클론 집진 방식의 신발 바닥 청소기(조달청)와 같이 보급된 일부 혁신제품은 잦은 고장,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 존재

#### ▪ 각 부처별 혁신제품 지침이 상이하여 기존 우수조달물품<sup>5)</sup>을 혁신제품으로 중복 지정하는 등 새로운 혁신제품을 지정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, 부처별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

### 부처별 추진체계 점검

[표 7] 기존 우수조달물품을 혁신제품으로 중복지정한 사례

| 구 분 <sup>1)</sup> | 혁신제품명 <sup>2)</sup> |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            | 혁신제품 지정기간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 | A                   | 2017.04.03.~2023.04.02. | 2021.06.01.~2025.05.31. |
|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  | B                   | 2019.12.30.~2025.12.29. | 2020.10.29.~2024.10.28. |
| 조달청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 | 2018.06.28.~2024.06.27. | 2022.09.27.~2025.09.26. |

주: 1) 부처명은 현재 기준으로 변경함

2) 혁신제품명은 비식별처리함

자료: 각 부처

### 종합 시사점

#### ▪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공공 부문 진출을 확대하고,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후속구매를 거쳐 공공 및 민간 부문에 확산시키는 데 있으나, 당초 정책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목표달성 노력이 요구됨

- 혁신제품의 안정적·지속적 발굴과 함께 적기 지정·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정 단계의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
- 시범구매에서 후속구매로의 전환율을 제고하고,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 하도록 할 필요
- 혁신제품의 공공성·혁신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투입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
-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

5) 조달청장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·중견기업 생산 제품 중에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는데, 지정기간은 3년(연장 포함시 최대 6년)이며,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함